

## “지회장 이름 걸고 총고용 보장·매각 저지 생취한다”

### 대우조선 매각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 열어 ...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명백한 재벌 적폐”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대우조선 밀실 매각을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이 2월 2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 성동조선해양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한진중공업지회, STX조선지회와 현대미포조선노조, 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 간부와 조합원들은 정몽준 재벌 퍼주기로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가 죽는다고 대우조선 밀실 매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노조 인정을 생취했고,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을 키워온 저력이 있다.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며 “산업은행은 밀실 인수논의를 중단하고 금속노조와 대화해 순리대로 풀어가야 한다. 이 길이 대우조선을 살리는 진정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조선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개별 사업장이 풀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노조가 조합원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겠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교섭해 조선산업이 부흥할 힘을 만들어 보겠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조선산업을 살릴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몽준 재벌 퍼주기에 불과한 밀실 매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매각을 추진하며 대화를 해보아야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신상기 지회장은 “정권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이 잘 나갈 때 온갖 부실회사를 떠넘기고 자회사를 만들었다. 나중에 부실 책임은 전부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웠다”라고 지적했다. 신 지회장은 “산업은행은 매각 과정에서 총고용 보장을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회장 이름을 걸고 총고용 보장을 생취하고 매각을 저지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결의 발언에서 “정몽준 일가는 지주회사를 만들어 돈 되는 회사는 죄다 자기 앞으로 돌리고, 조선 사업은 어렵다며 임금반납·단협

축소·정리해고로 조합원 고향을 찼다”라고 규탄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정몽준 재벌은 대우조선을 인수해 조선 지주사를 만든다며 다시 고향을 짜내려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명백한 재벌 적폐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행진해 마무리 집회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선거 당시 조선산업을 살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재벌에게 조선업 몰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4월 3일 재보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콜텍, 경영 위기대비 정리해고? 순이익만 1천억

콜텍 투쟁승리 결의대회 열어 ... 3월 7일 박영호 직접 교섭, “더는 인내심 없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콜텍 박영호 사장에게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 콜택지회 노사는 오는 3월 7일, 콜텍 정리해고 사태 13년 만에 박영호 사장이 직접 참가하는 노사 교섭을 벌인다. 박영호 사장은 지난 2월 18일 사장실로 찾아온 해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교섭을 약속했다.

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월 2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콜텍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13년, 콜텍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불법 정리해고를 자행한 박영호 사장은 이회용 상무를 앞세워 교섭을 회피하지 말라. 노조는 더는 양보할 요구도, 기다릴 인내심도 없다”라고 경고했다.

김정태 노조 대전충북지부장은 대회를 통해 “콜텍 같은 정리해고 되풀이를 막기 위해 3월 6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자”라고 강조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가 법제화하지 않았다면 콜텍 정리해고도 불가능했다. 과거를 보면 정권과 재벌이 자행하는 노동법 개악을 초반에 막지 못하면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노조는 파괴됐다”라며 총파업 성사를 호소했다.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



서 “콜텍 자본에 부당한 정리해고로 13년을 길거리에서 보낸 노동자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손해를 본 쪽은 회사라고 했다”라며 분노했다.

이승열 부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재벌들이 작당해 산별노조 노조 불인정, 파업 결정 후 60일간 효력 제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 한술 더 떠 자한당은 주휴수당 폐지를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다. 바로 지금이 노동자들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시기다”라며 총파업 조직화를 격려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노종화 변호사가 콜텍이 자행하고, 양승태 대법원이 인정한 ‘미래 경영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당한 해고’가 얼마나 기만이었는지 폭로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콜텍 자본은 정리해고 이후 10여 년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뒀다. 박영호 사장은 최근 2년 동안 70억 원이 넘는 주식 배당금을

가져갔다”라며 “이들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며 말했던 미래의 경영상 위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인근 노조 콜택지회장이 결의 발언에 나섰다. 이인근 지회장은 “박영호는 법원이 정당한 정리해고라 판결했으니 자신은 잘못된 일이 없고 사

과할 일도 없다고 한다. 잘못이 없다면 왜 13년 동안 노동자들을 피해 몰래 사무실을 들락거렸나”라고 꼬집었다. 이인근 지회장은 “해고자들은 최소한의 요구를 했다. 더는 양보할 게 없다.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박영호가 결단할 차례다”라며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 콜택지회는 지난 1월 30일부터 콜텍 본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정리해고 사과 ▲해고자 복직 ▲해고 기간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끝장투쟁에 들어갔다. 모두 일곱 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이회용 상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콜텍 박영호 사장은 해고자들의 최소한 요구마저 끝내 거부했다.

콜택지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전국에서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항의 방문을 위해 본사에 들어갔던 해고 노동자들은 사장실에 몰래 들어와 있던 박영호 사장을 13년 만에 마주했다. 박영호 사장은 계속된 요구에 마지 못해 ‘직접 교섭’을 약속했다.